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소매물도 등대섬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10일(제117호)

발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소 03186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02-2170-6092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Vol. 117

2024. 05.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지방시대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통해 기업, 인재,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어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는 시대이다.

2024년 역점과제

- ▶ 응급환자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상황실’ 본격 운영
- ▶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경남
- ▶ 전국 최초, 소방활동정보 도-시·군 실시간 공유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 찾아가는 빨래방 가동, 전국 최초 경남에서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산
- ▶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 TV’ 실버버튼 수상

경남의 주요정보

- ▶ 경남에서 즐기는 글로벌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꿈꾸다
- ▶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 ▶ 밀양아리랑대축제(5. 23. ~ 5. 26.)
- ▶ 하동야생차문화축제(5. 4. ~ 6. 3.)
-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1주년 기념행사

경상남도 우수사례

- ▶ 시민의 생애직업교육 플랫폼 「창원내일의학교」
- ▶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리는 스마트도시 통영!
- ▶ 고성, 청년 4자리(설·일·살·놀) 프로젝트
- ▶ 날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

의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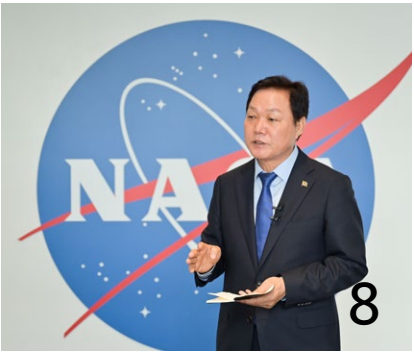
- ▶ 경상남도의회, 라오스 비엔티엔주의회 소방구급차량 기증
- ▶ 청년 취업난·역외유출 선제적 대응,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 협약”
- ▶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경상남도 ㈜코드오브네이처 박재홍 대표

정책포커스

-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확대를 위한 과제
- ▶ 지방자치의 진화를 생각하다 :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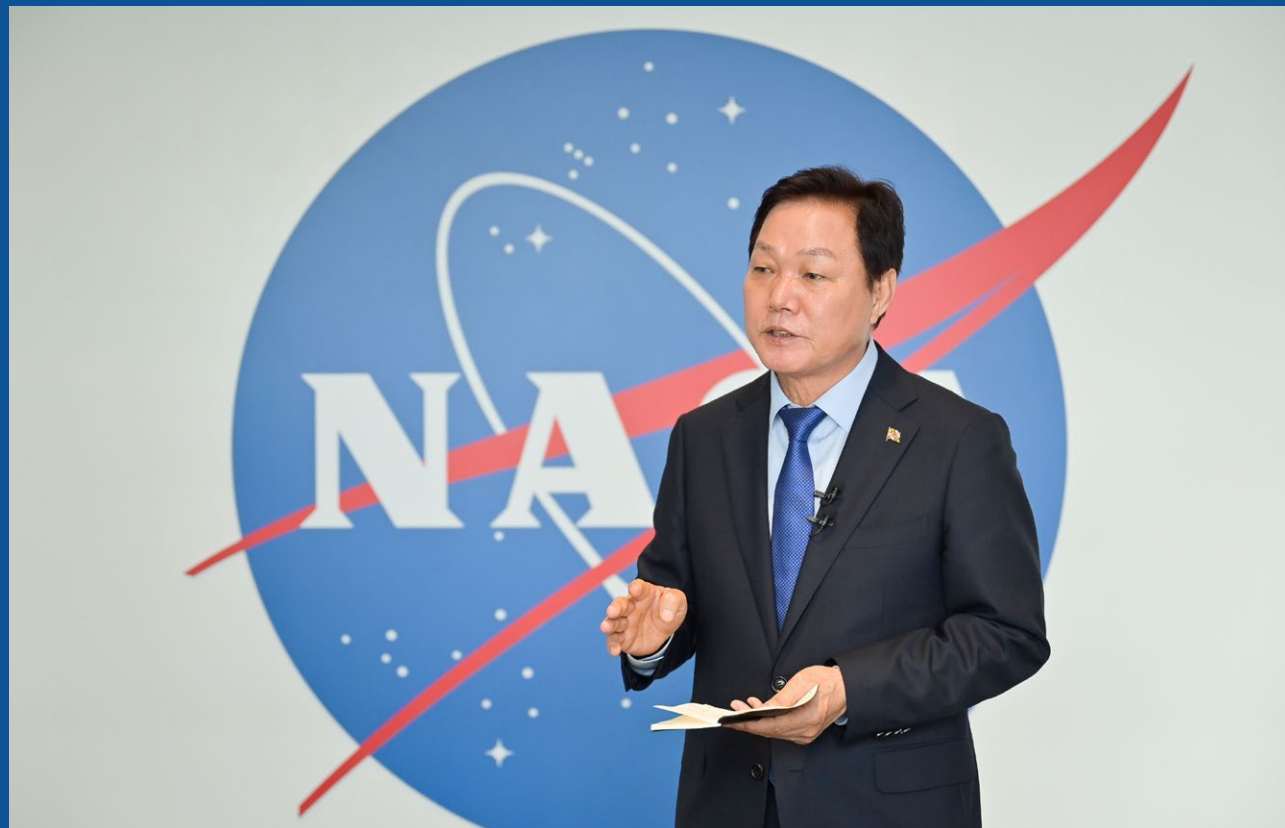




시도지사 칼럼

“지방시대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통해 기업, 인재,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어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는 시대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시도지사 칼럼

“지방시대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통해 기업, 인재,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어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소외받고 활기가 없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처럼 변한 듯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방은 갈수록 쇠퇴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아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권한을 통합하고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더 큰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 위협이다. 지방의 발전 없이 국가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경상남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역불균형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지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여 지방정부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지방시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들도 폭넓은 완화가 필요하다. 지방 또한 확대되는 자율성만큼 책임성을 함께 가지도록 노력해야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에 다가갈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초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해 인접한 지방정부와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철도·도로같은 인프라를 비롯해 남해안 광역 관광개발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긴밀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초광역 행정은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민선 8기 경상남도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슬로건 아래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들을 하나씩 마련하여 경남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감으로써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시대의 중심, 경남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사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우주산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우리 경남에서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매력적인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내 최대 우주항공기업인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104개의 기업과, 우주항공분야 글로벌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을 포함한 13개의 연구기관 등 산학연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71.8%, 우주산업 생산액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이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5월 27일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경남도, 사천시 및 관련 기관이 포함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2040년까지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사천시와 인근 시군 일원에 17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 경남도 산업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책임질 국가산단의 재도약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창원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50년을 맞았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1974년 4월 조성된 이후 경남의 산업경제를 이끌어 온 중추적인 핵심기지의 역할을 해왔고, 올해 4월 1일은 창원국가산단이 태동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창원국가산단은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제조업 사양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원국가산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디지털전환 및 첨단기술형 산업전환 ▲산업·문화·청년이 공존하는 친화형 국가산단 탈바꿈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인력 육성 ▲규제개선 등 산단운영 효율화라는 4대 전략이 담긴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으로 새로운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약속하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창원국가산단과 함께 50년이 넘게 대한민국 수출을 이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얻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공급망 구축과 마산항, 부산신항 등을 통한 물류 이동이 용이한 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 유치도 한결 활발해질 전망이며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관련 국비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도 '23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50년을 견인해 왔던 창원국가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과 함께 미래 50년을 짊어지게 되었다.

경남은 방위산업 수출 무기체계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의 생산지로 손꼽히기 때문에 'K-방산 주역'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창원에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정방산업체가 다수(27개사) 자리잡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산업 핵심기업과 다수의 협력사(324개사)가 입주해 있어 방위·원자력 산업 집적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경남도는 신규 국가산단과 함께 밀양 나노융합, 경남 항공 등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경남의 산업지도가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어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 남해안

남해안은 수도권과 대비해 천혜의 관광자원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경남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남해안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먼저,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주도의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치 등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1조 1천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과, 지역관광 일자리 증가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전남과 함께 남해안 관광 1호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5개 시군, 411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남해안 전체를 걸을 수 있는 “첼린지 순례길”과 승전지를 관광하는

“테마형 순례길”로 구분하고, 승전지 주변 해안탐방로와 전남과 연계하는 경남 구간의 수군 재건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통영권내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화를 실현하고 시군 간 연계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해양관광 마리나허브 조성 추진을 위하여 11개월동안 세계주요항구를 거쳐 세계일주 기록을 경쟁하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를 유치하여 경남의 해양레저스포츠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매력있는 관광 콘텐츠도 지속 개발한다. 작년에 시범운영한 5대 테마투어 중 인기가 있었던 지리산, 해양레저 테마는 지역을 확장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 이순신, 가야고분군 등 역사관광 테마는 인근 관광지 및 체험 콘텐츠와 결합하여 고도화한다. 또한 중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관광상품도 개발·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하여 우주항공기술전 개최 등 특화전시회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디지털 컨벤션 장비 구축 등 CEOO 기능 강화로 컨벤션 가동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남해안은 매력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해양관광진흥지구”지정과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본격적인 남해안 개발과 성장동력화를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면 남해안이 K-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경남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경제 기상도 ‘쾌청’

경남도의 경제 기상도는 쾌청하다. 그간 방산, 원자력, 항공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기업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여 지난해부터 경제지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의 연간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3/4분기 대비 1.8%p 상승하였고, '23년 11월 기준 백화점, 마트 등에서의 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4.0%p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경남의 수출액은 420억 달러로 '22년 대비 15.2%가 상승하였고, 무역수지는 1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2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률은 62.0%로 전년대비 0.9%p가 상승하였고, 취업자는 176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통계청 취업자 수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올해는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비제조 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호전된 경남의 민생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질병, 생활고 등으로 인한 제도권 밖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기존 복지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다변화하고, 민·관이 더욱 밀착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표단체 등 구성원을 위주로 '22년부터 범경남복지 TF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단체인 우체국, 의료보험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기관·단체를 비롯한 3만 4천여 명의 이웃들이 참여하는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23년 11월에 출범하여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문제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와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복지 주체별로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세심하게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역점과제

1. 응급환자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상황실' 본격 운영
2.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경남
3. 전국 최초, 소방활동정보 도-시·군 실시간 공유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4. 찾아가는 빨래방 가동, 전국 최초 경남에서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산
5.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 TV' 실버버튼 수상



1. 응급환자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상황실' 본격 운영



전국 최초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경남도청 신관 3층에 개소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개소 현판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4개 팀 12명(지원단 8·소방 4)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 병원 도착까지 119소방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송될 병원을 선정하고 전원조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응급의료상황실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경남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플랫폼이 완성되면 모든 응급환자의 발생과 신고, 병원 선정과 이송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응급환자 보호자에게 이송병원을 안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경남

경남도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23년 1월부터 매월 1회 도민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도민회의는 도지사가 주재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제는 도정전반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청년, 복지·가족, 교육, 문화·예술 등 도정현안에 적합한 주제를 정해 다양한 분야의 도민대표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24년 3월까지 개최된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 192건 중 180건을 도정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3. 전국 최초, 소방활동정보 도·시·군 실시간 공유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정보를 도와 시군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상황전파 시스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에 소방의 재난현장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전화와 같은 유선통신 위주로 정보를 전달해 신속한 정보 수집·전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실시간 소방 정보를 도와 시군에 즉시 공유하는 재난상황전파 시스템을 구축했고, 전국 최초로 재난 초기 단계부터 재난정보공유 중심의 협업 대응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방은 최초 신고내용, 재난 위치, 출동 소방력, 현장 영상 등을 도와 시군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이 원활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복구·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4. 찾아가는 빨래방 가동, 전국 최초 경남에서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산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이불 등 대형빨래의 세탁을 위해 특수제작된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특수제작한 이동빨래차량은 도내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주 5회 운영 중이다. 이용과 운영은 매월 10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제공 지역을 선정하여 도내 곳곳을 방문하며, 지난해에는 1만 2,000여 건을 추진했다.

경남도가 2015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펼칠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 도내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경남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99% 이상으로 높은 사업이다.

도는 도내 전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5.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 TV’ 실버버튼 수상

지난 4월 공식 유튜브 채널 ‘경남TV’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경남도가 실버버튼을 받았다.

실버버튼은 유튜브 본사가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인증이며, 경남도는 구독자 10만 5,10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 2010년 11월 개설된 경남TV는

민선8기 출범 당시 구독자가 1만 5천 명이었으나 2022년 8월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해 영상미디어 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파격적인 콘텐츠 제작에 집중한 결과 1년 9개월 만에 574%가 증가하며 지난 4월,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경남 TV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 제작하는 ‘주무관이 간다’, 영화 주제곡과 레이싱 드론으로 도내 명소들을 소개하는 ‘시네마틱 경남’ 등 경남만의 매력과 정보를 담은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10초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재미와 정보는 물론 경남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콘텐츠로 인지도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의 주요정보

경남에서 즐기는 글로벌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꿈꾸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밀양아리랑대축제(5. 23. ~ 5. 26.)

하동야생차문화축제(5. 4. ~ 6. 3.)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1주년 기념행사



경남에서 즐기는 글로벌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꿈꾸다

경남에는 해마다 10월이면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가 개최된다.

* Migrants(이주민) Arirang(아리랑) Multicultural(다문화) Festival(축제)

2005년 시작된 맘프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내외국인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맘프는 국내 14개 교민회와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참여형 문화축제로서 국내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축제로 성장하였고, 올해부터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경남 창원에서 개최될 맘프는 Together to Gather(다 함께 모이는 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예술공연부터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세계문화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의 주빈국 국립예술단과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의 개막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내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릴레이 무대인 '프린지&버스킹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맛볼 수 있다.

둘째 날 이어지는 주빈국 예술단의 특별공연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주빈국만의 문화적 특색을 느낄 수 있으며,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댄스 페스티벌'을 통해 축제의 즐거움을 동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국가의 예술인과 교민회의 문화공연인'마이그런츠 아리랑'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맘프 축제의 꽃인 '문화다양성 퍼레이드'가 이어져,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인 '월드 뮤직 콘서트'에서는 해외 뮤지션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볼거리 뿐만 아니라 놀거리와 먹거리까지 풍성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세계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올해 맘프 축제는 주빈국을 필리핀으로 선정하여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외교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비즈니스 테이블 개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과 경남 산업발전을 견인한 창원국가산단은 올해 지정 50주년을 맞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기념행사 주간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경상남도가 주최하고,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써,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메인행사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으로, 미래 50년 비전 선포와 과거 50년 창원국가산단과 함께 해 온 1호 입주기업대표·명장 등이 참여하는 세레머니, 기념행사 주제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대행사는 컨퍼런스, 산업관광 기업투어, 만찬리셉션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기념주간에는 축하음악회, 드론쇼, 불꽃쇼, 기업문화체험, 전시회 등이 도민과 함께 했으며,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성하여 다채로운 도민참여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밀양아리랑대축제(5. 23. ~ 5. 26.)

밀양아리랑대축제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밀양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1957년 밀양문화제로 시작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향토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밀양아리랑경연대회, 아리랑 주제관 등 각종 공연 및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밀양의 대표 관광지 영남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밀양강 오딧세이’는 밀양의 역사와 아리랑을 결합해 창작한 판타지 뮤지컬로, 1,500여명의 시민 배우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대를 펼치게 된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5. 4. ~ 6. 3.)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 하동에서 펼쳐지는 야생차 문화축제는 정부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올해로 27회를 맞이한다. 하동 화개면과 악양면 일원에서 개최되며 예로부터 ‘왕의 녹차’라 불리우는 하동녹차를 다례 경연대회, 차밭길 걷기 등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으며, 축제와 함께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둘러싸인 하동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개최되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경남도내 11개 시·군에서 열린다.

경남도에서는 경남의 문화·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소재를 중점 부각하고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차별화된 개·폐회식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며, 경남의 명소를 활용한 공식채화(10월, 강화도 마니산)와 특별채화(9월),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연계한 특색 있는 성화 봉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람객과 선수단에게 불거리 제공을 위해 체전 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한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1주년 기념행사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5개 시군(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함천)의 가야문화제 시기를 조정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26일간 릴레이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연속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이 찾아오도록 가야고분군 방문의 기간을 아낌차게 계획하고 있다.



경상남도 우수사례

1. 시민의 생애직업교육 플랫폼 「창원내일의학교」
2.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리는 스마트도시 통영!
3. 고성, 청년 4자리(설·일·살·놀) 프로젝트
4. 날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



1. 시민의 생애직업교육 플랫폼 「창원내일의학교」



우리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변화'의 시대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라는 지방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에서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부족이 창원시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창원내일의학교」 사업이 시작되었다(2023~2027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이제는 취미교양 강좌 위주의 평생학습의 분야를 보다 확장하여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설계하고 생애전환기마다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창원내일의학교」는 창원에서 살아가는 20~60대 시민들이 삶과 일의 의미를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생애 직업교육 플랫폼이다. '내일'은 창원시민의 미래(future)를 뜻하는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일(work)을 의미한다. 창원시는 2023년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창원시가 본부, 3개 대학이 권역별 캠퍼스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우선 직업 관련 시민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과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디지털 트윈×융합 설계전문가', '전기기능장 과정'은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조향 전문가', 'K-젤라토 메이커' 등의 과정은 관내 기관, 지역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하여 수강생들이 학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도 이모티콘 작가' 과정을 통해 제작된 수강생의 작품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채택되어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2023년 진행된 시범운영 사업에서는 직업역량 강화 9개, 재직자 스킬-업 5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287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 전반 98.1%, 직무 및 직업역량 강화 94.1%로 학습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에서는 2024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6개 대학과 함께 31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수요에 대응한 직업교육의 특화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2.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리는 스마트도시 통영!



▶ 더 똑똑해진 통영~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등 외형적인 투자를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 환경, 의료 등 도시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운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통영시는 시민 요구사항과 도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도출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공모사업과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교통관련 스마트 솔루션을 통영시 전역 구축해 나가고 있다.

▶ 바쁜 일상,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주차장은 주차패스!!

여행을 가거나 업무상 출장을 가는 운전자의 최대 고민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통영을 방문하는 운전자는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다. 통영으로 출발전 주차장을 검색하면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갈 제공되는 11개주차장의 주차 가능면수, 주차요금 현황 등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 횡단보도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 주변은 사라진다. 오죽하면 스몸비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통영시는 기존 보행자 신호와 연동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에 집중한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보행신호상태를 보여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도 경계석을 넘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음성안내 보조시스템이 경고 방송을 송출, 보행자가 안전한 인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횡단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 스마트 기능은 기본, 디자인은 옵션, 처음 경험하는 스마트 쉼터 서비스

통영시는 기존 버스 버스정류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깨끗한 공기질, 안전과 편의, 스마트 환경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정류장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시간 버스정보를 디스플레이는 물론 음성으로 안내하여 버스 쉼터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고, 실내외 공기질 측정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제공과 실내 공기질 악화 시 공기청정기가 자동 가동되어 언제나 깨끗한 공기질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교통관련 도시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도시정보 관리,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전국 어느 도시보다 스마트한 도시로 탈바꿈 해 나갈 계획이다.

3. 고성, 청년 4자리(설·일·살·놀) 프로젝트

청년 4자리 프로젝트는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의 4개 정책 목표 및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는 고성을 비전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2022년도에 경남 고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이다.

군은 지난해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청년민회를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는 청년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청년민회에서 직접 결정한 청년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어 참여 열기가 더욱 뜨겁다.

군은 지난해 청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고성군 청년정책사업 제안 공모전'을 열어 총 40건의 정책 제안을 받아 도내 최초로 고성 청년 2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청년민회를 개최해 총 40건중 12건의 청년정책을 결정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4개 사업과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제안 정책사업 3개, 총 7개 지원사업에 대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의 발걸음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사무실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중에서도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초기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동지 적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신청자가 486명으로 사업대상인 80명을 600% 이상 초과하며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는 청년들의 소통과 연계,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고성군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고성군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

하동군은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 추진으로 결혼 후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3년 2월 조례개정을 통해 결혼장려금은 도내 최대 금액인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3년간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900만원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염색체 검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산전 진료비, 엽산제, 철분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추진 중이며 2024년도에는 출산 전 임신부의 가사노동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임신부 가사 돌봄서비스는 임신부의 가정에 가사 관리사를 파견해 청소, 세탁 등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 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움으로써 임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에는 6세 이전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는 둘째아 이상 양육수당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함께 키운다는 공감 아래 2023년부터는 이유식 전문 사회적경제 기업인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과 협약을 맺고 출생아에게 8개월 동안 이유식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하동군에서는 5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돌봄서비스인 7



TO 23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영유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하동아카데미는 발레, 바이올린, 키튼 체육, 하브르타 등 61개 프로그램을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도·농 교육 격차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배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초등학생 영어캠프, 고등학생 국외연수 지원, 대학생을 위해서는 군민장학금, 서울권 대학 생활관인 남명학사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초·중·고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세심하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으로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을 만들어 청년들이 하동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회소식

- 1. 경상남도의회, 라오스 비엔티엔주의회 소방구급차량 기증
- 2. 청년 취업난 · 역외유출 선제적 대응,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 협약”



1. 경상남도의회, 라오스 비엔티엔주의회 소방구급차량 기증



경남도의회가 보낸 소방구급차 12대가 라오스를 누비며,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지난 3월 25일, 우호교류 협약단체인 라오스 비엔티엔주 의회에 소방 특수구급차량 10대와 특수방화복 60착 등 소방용품을 기증하고 기증식을 개최했다. 2대는 인근 바깥에 주에 전달됐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대신하여 방문단장을 맡은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과 경남도 소방본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 방문단은 라오스 현지에서 직접 찾아가 기증식을 열어 구급차량 등 기증물품을 전달하고 운용기술을 전수했다.

이번 라오스에 기증한 구급차는 사용연한은 도래했지만, 현지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마친 구급차로 열악한 구급환경으로 제약이 많은 라오스의 소방 및 구급환경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 취업난·역외유출 선제적 대응,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 협약”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청년 취업난과 역외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을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내 소재 6개 대학(도내 4년제 대학 중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설치된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과 대학생 인턴십(2024년 여름방학 시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대학생에게 의회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별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도의회와 협약 대학교가 협력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진부 의장은 “도의회와 지역 대학은 경남의 미래인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도의회와 6개 대학간 교류·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4월 의원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와 5월 의회·대학의 인턴 선발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까지 6주 동안 ‘제1기(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경상남도를 남부권, 북서부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주민발안제도 홍보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계획한 행사로 5월 10일 14시에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산청군, 7월 창녕군, 9월 진주시와 양산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청구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의 사례 외에도 시·군별 청구사례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본 행사의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나도 한다!

권역별 홍보 설명회개최 <경상남도의회>

일 정	설명회 개최 장소	참가신청 접수
24년 5월 10일(금)	<거 제> 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시 제물로 13길 6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 하면 참가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남도민 누구나 신청가능!)
24년 6월 25일(화)	<산 청>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산청군 금서면 천황로 2631번길 12	
24년 7월 19일(금)	<창 념>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창녕군 창녕읍 우포로 1189-75	
24년 9월 24일(화)	<진 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대강당 진주시 대산로 570	
24년 9월 27일(화)	<양 산>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양산시 중앙로 39-1	

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조례를 수정 또는 폐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009년

버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2009.11.03 청구
 황00님 등 대표자 3인
 서명인원 26,301명
 (최소연서수 24,559명)
 2010.07.27 발의
 2010.11.04 공포

2019년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

2019.07.01 청구
 김00님 등 대표자 6인
 서명인원 46,184명
 (최소연서수 27,788명)
 2020.03.30 발의
 2020.06.25 공포

권역별 홍보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께 알려드립니다.

- ✓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확실한 설명
- ✓ 도의원 발의와 주민조례발의의 차이점 안내
- ✓ 실제 조례 청구과정("주민c 직접") 안내

홍보물, 관련자료 등은 설명회 당일 배부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공감담당 TEL.055-211-7093으로 연락바랍니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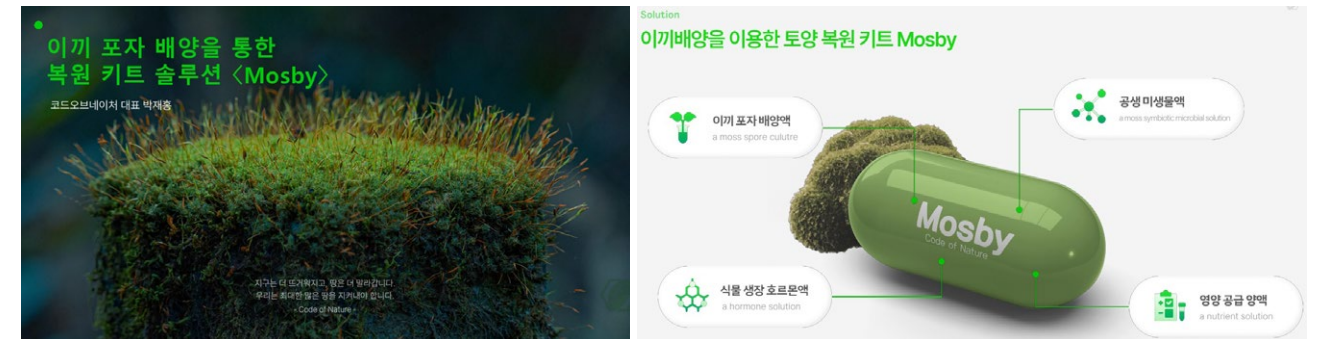
(주)코드오브네이처 박재홍 대표
이가현(지방시대 서포터즈 19기)



이끼로 실현하는 토양 황폐화 중립

(주)코드오브네이처는 이끼 포자 인공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황폐해진 토양을 복원하는 키트를 만드는 기업으로, 다양한 토양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출발했다. 주요 사업인 토양 복원 키트, 모스비(Mosby)는 이끼를 액체화한 후 적응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각종 영양액과 혼합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토양 복원 기술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산불로 손실된 산림을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지역에 사용되며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그동안 다수의 수상을 하고 특허를 등록해 왔으며 2023년 9월에는 국내에서 개최된 유명 스타트업 경연대회 '임팩트 퀘스트 그랜드 파이널'에서 최종 우승을 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업의 비전인 '이끼로 실현하는 토양 황폐화 중립'에서 토양 황폐화 중립이란, 황폐해진 산림이나 토지를 복원하여 추가적인 토양 황폐화를 억제해 전체적으로 토양 황폐화 순증률을 0으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지구를 넘어 우주의 토양까지 복원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코드오브네이처의 박재홍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우연히 이끼에 빠지다

처음부터 이끼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학창 시절 공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부산 조리고를 다녔는데, 요리를 좋아했고 요리사가 꿈이었다. 하지만 손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고 그다음에 도전한 것이 귀농이었다. 경남 함안에서 고추와 들깨 농사를 지었는데 우연히 시골집 지붕에서 자라는 이끼를 발견했다. 보통 이끼는 습하고 그늘진 곳에만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밝고 건조한 곳에서도 사는 것이 신기했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나중에 농사도 실패해서 농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농대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연구하게 된 식물이 이끼가 됐다.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에서 이끼 관련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아 연구에 사비를 써야 했다. 게다가 등록금, 생활비까지 스스로 감당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비를 벌기 위해 공모전에 도전했다. 생각보다 공모전 성과가 좋았고 너무 잘 풀려 창업도 하게 됐다. 당시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회복이 어렵다는 게 큰 이슈였다. 여기서 이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한 아이템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산림을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아이템으로 현재는 황폐해진 토양 환경 복원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목표가 됐다.

왜 경상남도인가?

농사 공부를 위해 진학한 학교가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의 식물생명과학과다. 학교에서 창업하고 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업할 생각이 없었고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아 연구비를 충당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꾸준히 성과가 나오니 학교에서 학과 홍보에도 좋고, 학교 홍보에도 기여가 되니 특별히 사무실을 하나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곳에서 연구하고 생활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창업까지 하게 됐다. 당시 개인 연구실 개념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인 창업보육센터 403호로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면서 밀양에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지방에 있으면 서울의 기업보다 받을 수 있는 특혜들이 많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템이 서울에서 바로 주목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니라 경남에서 계속 활동하게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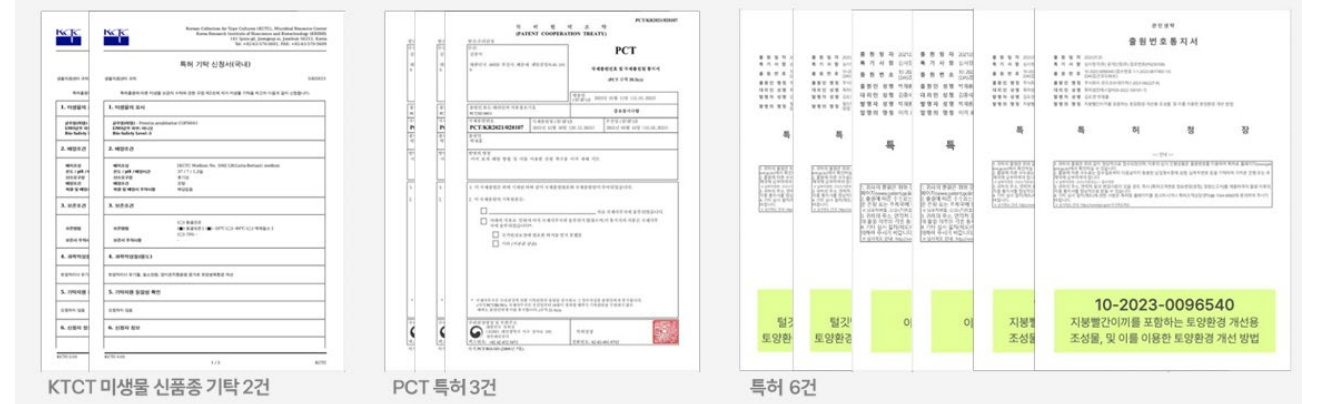
기업의 성장 동력

창업 이후 약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시기가 잘 맞았다. 국내에서 환경 복원이라는 개념은 되게 모호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환경 관련해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많이 생겼다. 그 때문에 ESG, CSR, CSV같은 개념들이 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고, 동시에 스타트업 산업계에서도 해당 요소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어 빨리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둘째는 아이템의 콘셉트가 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등록·확보한 특허와 신규 품종이 약 15건에서 20건 정도가 된다. 국내에서 많이 개발되지 않은 사업 분야인데 비해 기술력 자체가 높았고 그래서 주목받은 만큼 관심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동시에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를 마친 R&D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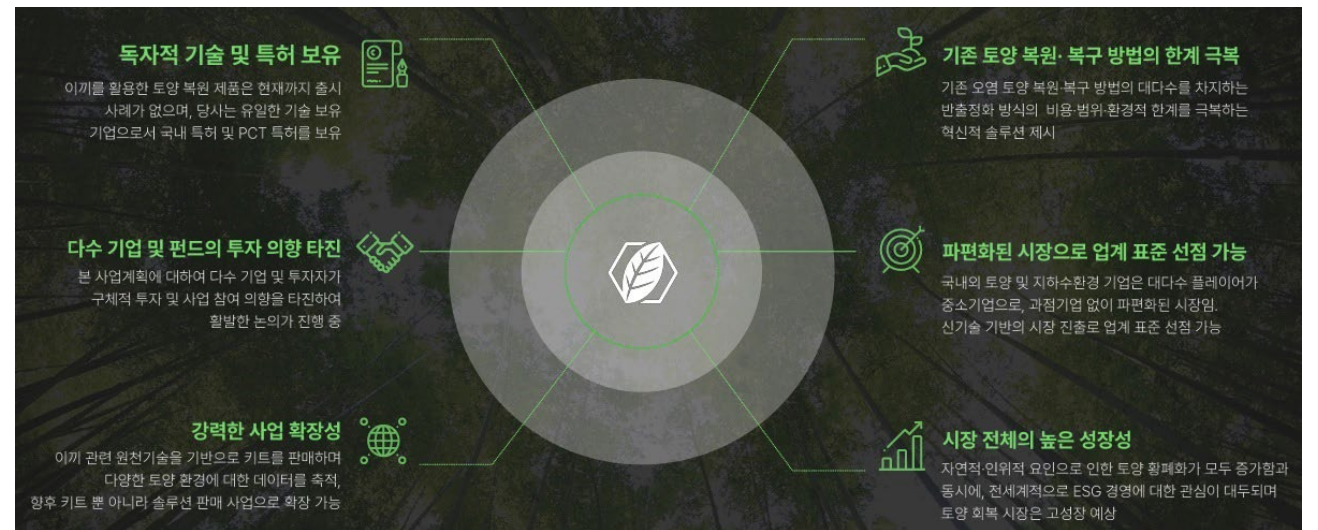
* 2023년 1년간 신제품 관련 확보 지적 재산권

신제품 (COFN, Code Of Nature 약자) 개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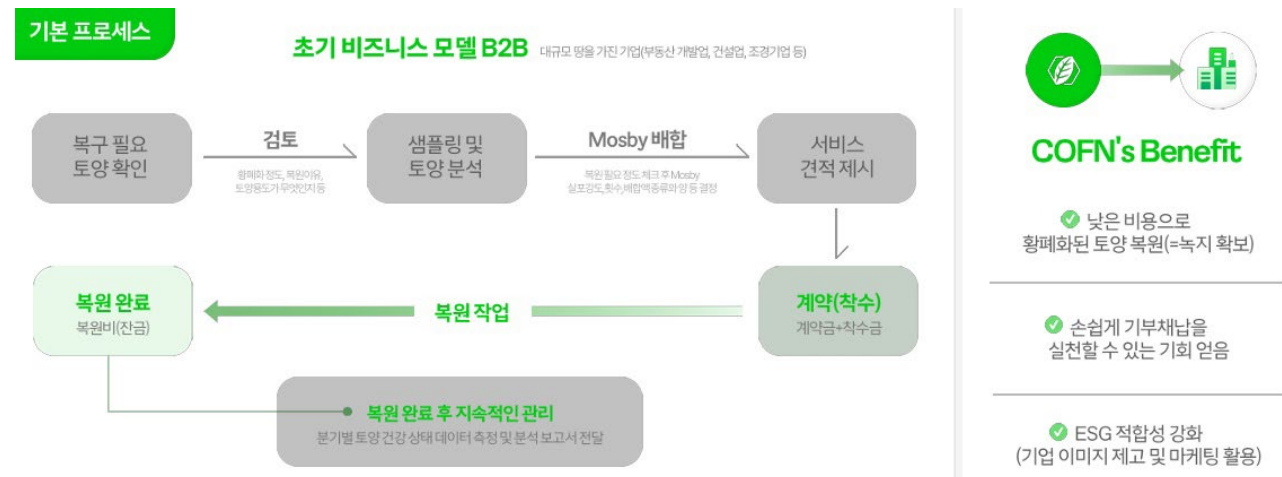
우리 기업만이 가진 것

2023년에는 세계 3대 사모펀드(PF) 운용사 중의 하나인 EQT 그룹이 사회적 가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EQT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경연대회인 '임팩트 퀘스트 그랜드 파이널'에서 최종 우승했다. 그 비결은 다른 환경 분야 기업이 준비하고 있던 콘셉트는 해외에서도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나 비슷한데 더 뛰어난 기업이 많은 편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가 가진 콘셉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없으며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그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환경 분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과 분야는 타 환경 분야와 비교해 발전이 더디고, 동시에 가장 빠르게 발전되어야만 하는 분야다. 토양 환경 복원 시장과 기술 발전 속도는 탄소, 에너지, 전기차 등 타 분야보다 주목을 덜 받고 있고, 기존 토양 환경 복원 기술은 매우 많은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오디션에서 이 점을 늘 강조했고 '과연 이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해낼 수 있을까?'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비전과 보유한 기술을 잘 설명하는 데 집중했기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토양 복원 시장은 국내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더욱 노리고 있다. 올해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 해외 일정을 소화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며, 우리 제품이 실제로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사업인 POC(proof of concept)에 참여하기도 한다. 우리 샘플을 보내서 실제로 해외 기업이 사용해 보기도 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등 많은 것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실제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해 해외 진출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젊은 대표의 고충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보통 '젊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업에서는 젊다는 게 큰 단점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사업에 30억에서 50억, 많게는 100억까지도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자들에게는 경험이 없고 어리다는 게 큰 리스크가 된다. 사회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면 기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업하고 지금까지 여러 미팅, 발표 자리 등에서 사업을 위해 만나는 모든 분께 서툴지 않고 철저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말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 데이터 위주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우리의 경험과 가설이 아닌, 결과로 증명된 것과 실험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관찰 가능한 것들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수집하고 전달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앞으로도 관찰 가능한 결과 데이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사업 목표와 연구 목표로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사업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매출을 높여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가 막 시작된 시기고 앞으로 해외 투자를 좀 더 많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 진출은 현재 미국과 대만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중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력 검증은 충분히 되었으니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에서 확보한 이끼와 미생물 신제품이 총 3건이 있는데, 이를 올해 안에 5건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해외에서 자생할 수 있는 품종이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품종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종자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는 기업의 힘이고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의 복원과 환경의 회복에 특화된 품종들로 구성해 나갈 것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코드오브네이처의 비전을 실현할 팀원들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벌과 성별,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만 보고 팀원들을 모아왔고, 모두가 서로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분위기와 웃음이 끊기지 않게 충분한 보상으로 자신의 노력에 만족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지방시대 매거진〉구독자분들께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더 많은 분이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회사 슬로건인 '하늘에서 자연이 내리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역에 우리 제품을 뿌릴 수 있는 그 날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주)코드오브네이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부지런히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조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책포커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확대를 위한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화연

지방자치의 진화를 생각하다 :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문병기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확대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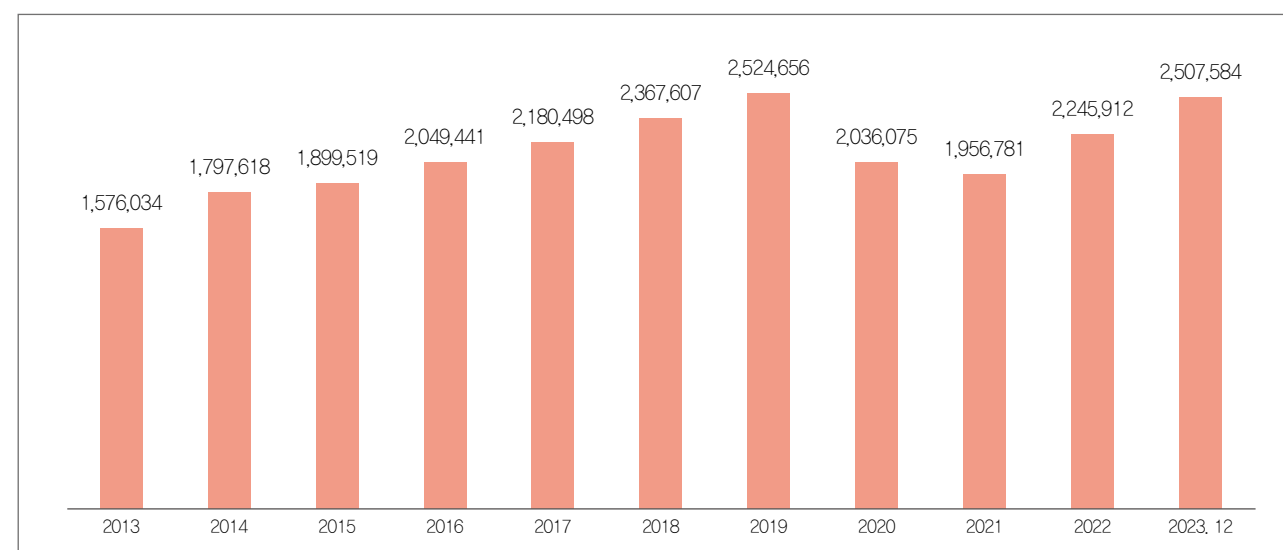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507,584명이며, 코로나19가 확산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 인구는 데드크로스에 직면하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 유치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여겨졌던 이민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림-1〉 연도별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건, %)



자료: 법무부 통계월보(23년 12월)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수는 총 인구대비 4.4%이며,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음성군 15.9%, 안산시 14.2%, 영암군 14.2% 등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시·군·구가 12개에 달한다.

〈표-1〉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10% 이상 시·군·구 현황

구분	음성군	안산시	영암군	진천군	영등포구	구로구
외국인주민 비율	15.9%	14.2%	14.2%	12.5%	12.5%	12.5%
구분	금천구	시흥시	포천시	안성시	서울 중구	아산시
외국인주민 비율	12.5%	12.4%	12.3%	12.2%	11.1%	10.6%

출처: 행정안전부(2023)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2.11.1. 기준)」

이러한 배경으로 이민정책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민정책에는 국가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으나 지역별 이민자 유형이나 비율이 상이하여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지방소멸 위기와 주요 산업의 인력난을 고려할 때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역특화형비자사업¹도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확대를 위한 과제

우선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기획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정책의 이해가 높은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민이 외(2020: 133)에서는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전문성·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전담부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경상북도는 2023년 [지방시대정책국] -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비슷한 시기 광주광역시 광산구도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여 외국인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비율이 높고 관련 정책에 관한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행정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전체 시군구 중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비율이 가장 높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관련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정책과] - [외국인지원팀]에서 소수 인원이 일부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인구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외국인관리팀]에서 외국인 정책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기단계로 아직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였다.²

한편 지방정부 내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 이에 순환보직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등을 활용하여 전담인력으로서 연속성·전문성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 실제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외국인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사증발급과 같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방정부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선별하고 지방에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2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³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을 위해서 광역-광역,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별 조사품질 개선 및 중앙-지방 간 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별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외국인·다문화가족 실태조사’등 다양한 이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사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니 조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지자체 간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동일하게 조사되면 좋을 공통지표에 대해 정의, 산출방식, 조사항목, 통계표 구성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공유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정책 수립·운영·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다.⁴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청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 향후 이민청이 신설된다면 부처 간 분절되어있는 정책추진체계 정비와 더불어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지역특화형비자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지역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F-2)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외국 인력이 필요한 업종과 인원, 비자유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를 추천한다(법무부, 2023).

2 다문화가정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은 [RISE 추진과]와 [국제협력센터]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2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4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로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정하고, 세부과제로 ‘① 지역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 ③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참여 및 인프라 강화’를 수립하였다.

지방자치의 진화를 생각하다: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노령화 및 극도로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위기가 큰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2명이라는 수치를 2023년에 받아 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더욱이, 노동시장에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이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심각한 실업 사태, 특히 청년실업으로 인생의 파탄을 걱정하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특히 소위 3D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책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 노인인구 고용 확대 정책,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수십 년간 펼쳐졌다. 출산율 제고 정책 하나만으로도 지난 15여 년간 약 280조의 재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그 어떤 정책에서도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대 비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는 없다는 결론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한국 내 유입(in-migration)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이민정책 관련 이슈가 생활현장과 산업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지방이고 지역이라는 데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해 줄 든든한 인구집단으로서의 이민자가 실제 살아가는 곳은 지방과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방과 지역의 생활인프라를 디딤돌 삼아 외국인근로자를 위시한 이민 배경 인구가 우리와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산가능인구 및 소비집단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진화와 이민정책의 발전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2.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의 의의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에 있어서 기본 대원리는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소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상위 지방정부는 기초 및 하위 지방정부에게 정책적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기초 및 하위 지방정부 간에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상위 지방정부가 앞장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광역시 및 도와 같은 상위 지방정부가 유념하여야 할 것이 정책효과의 광역성과 장기성이다. 상당히 많은 정책이 그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개별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표출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지속적이고 불가역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격이 특별히 강한 것이 이민정책이다.

국경을 넘는 이주를 통해 일정 규모의 인구가 일단 유입되면, 필연적으로 그 유입된 인구는 수용국 전역으로 퍼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힘으로써 이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입된 것은 사람이지만 노동력이나

수요가 아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와 차원으로 수용국 국민과 문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한 상호작용과 영향은 시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확산 및 확대됨으로써 2차, 3차의 파급효과를 표출한다. 따라서 이민정책이 배출하는 결과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한마디로 일찍이 1982년에 공전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존 네이스비츠의 비유처럼 「메가트렌드(Megatrends)」가 되는 것이다.

이민정책의 본질적 성격이 전체성, 장기성, 그리고 불가역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민정책은 단순히 당장의 수요부족이나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민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초고도 산업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굳건하게 발전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어야 하고, 세계 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실질적으로 이민정책은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과 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본 틀을 다시 설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만큼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적 파트너로서 광역시 및 도와 같은 상위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주역이다. 그 관할범위의 광역성과 행·재정력의 방대함, 그리고 정치력의 크기를 고려할 때, 광역시·도와 같은 상위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이민정책의 설계와 추진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이민정책이 임기응변적으로, 다시 말해 입체적 설계의 미흡과 유사 중복성을 배태하고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여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의 시대적 의의가 여기에 있다.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정책 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Oates, et al.(1971)의 도시동태모형(urban dynamic model)을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도시동태모형은 현재의 한국 사회와 같이, 장기적 저성장 시대의 추세를 상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도와 같은 상위 지방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 여건의 일시적 개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그보다는 지역의 체질 향상 및 구조적 역량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사회적 자본 및 통합의 메커니즘을 축적해 가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의 기능 및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적극적 지원자와 후원자의 소임을 수행해야 하며, 사전적 감시체제 또는 사후적 통제체제의 구축보다는 지식과 능력의 이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기적 추세의 근본적 상향 이동(upward shift)을 위해서는 절편값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는 바로 광역시·도와 같은 상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구조의 개선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성장인프라의 구축을 의미한다.

3.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의 사례

구체적으로 상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정책사례 및 관련 이슈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최근 다양한 이름으로 제안되고 있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선결과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 산업 및 인프라의 개선이다.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당장의 취업이라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외국인 인재 본인의 미래에 관한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다. 좀 더 많은 금전적·비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는 기업, 더욱 전도유망한 업종과 산업으로 인재가 물리는 것은 노동시장의 냉엄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즉, 광역시·도 내 산업과 소속 기업들이 그러한 유인을 스스로 갖추어야만 광역비자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 외국인 인재가 보기에 광역시·도 내 소규모 기업, 특히 기피 업종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실천적 전략을 고민할 때다. 동시에 정주 여건의 향상을 위한 지역인프라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의 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의료·보육을 위시한 정주 여건의 수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도 여타 지역으로 재이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해외 우수인재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구분없이 모두가 ‘우리’라는 생각 아래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광역시·도라는 지역사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한은 동등하게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 보호를 넘어서서 지역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원주민 대 이민자의 대립과 박탈감이 엄연한 상황에서는 총력대응체계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관용에 치중하고 이질화를 방지하는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 및 쌍방향통합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이민자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정교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영세예산과 일회성 행사에 급급한 기존의 다문화주의 관련 조직과 사업을 혁신해야 한다.

나아가, 광역시·도 원주민들에 대한 세계시민교육도 보다 저변에서부터, 좀더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특히 지역의 문화다양성 수용능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향적 이민정책의 대상이 이민자뿐이라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이민자의 반대쪽에 원주민이라는, 훨씬 큰 정책대상이 전향적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때만 관련 제도는 정착할 수 있다.



셋째, 이상의 과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정책 주체간 연계 노력의 중요성이다. 비자제도의 개편과 지역인프라의 혁신, 주민인식 개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 관련 사업과 제도가 일관성 없이 각각의 부처와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정책개념과 칸막이 아래에서 진행되면서 엄청난 유사 중복성과 정책 혼선이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바꾸고자 할 때 예상되는 정책저항도 또한 엄청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라는 상위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파트너로서 기획-총괄-조정기능을 공유하는 이민정책 네트워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민정책 네트워크체계는 인근 광역시·도 상호간에, 그리고 광역시·도와 그 하위 기초 지방정부 간에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내밀한 협력과 책임의 공유를 의미하는 소위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체계이다. 기존 조직의 확대나 사업과 전달체계의 막무가내식 통합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책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담론의 창을 활짝 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 역량과 자원을 힘껏 포섭(cooptation)하는 순발력과 적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4. 끝맺는 말

지금까지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의 구현을 위해 이민정책의 전체성, 장기성, 그리고 불가역성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한편, 글을 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대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이다.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은 기초 및 하위 지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소극적·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전체로서 정합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련하여 부각하고자 하는 정책이슈가, 기초와 광역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민자의 정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적실성(relevance)이 있는 자제인가라는 점이다. 이민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최우수 세계시민국가로의 진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의 일선 정책현장에서 찾아내고 또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기초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어떤 유형의 이민자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치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들을 건전한 산업인력으로 활용하여 선순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주단계로까지 유도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배려가 필요하다. 광역적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그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각 하위 지방정부의 일선 현장에서 이민정책의 적실성을 극대화하게 하는 정교하고도 총괄적인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의 진정한 모습이다.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5월호는 '경상남도' 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박완수 지사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응급환자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상황실' 본격 운영」,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경남」, 「전국 최초, 소방 활동 정보 도-시·군 실시간 공유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찾아가는 빨래방 가동, 전국 최초 경남에서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산」,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 TV' 실버버튼 수상」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경상남도 시·군·구 우수사례』에서는 시민의 생애 직업교육 플랫폼「창원 내일 의학교」,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리는 스마트도시 통영, 고성 청년 4자리(설·일·살·놀)프로젝트, 날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경상남도의회 라오스 비엔티안 주의회 소방 구급 차량 기증과 청년 취업난·역외유출 선제적 대응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 협약"을 소개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경남에 이끼 포자 인공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황폐해진 토양을 복원하는 키트를 만드는 ㈜코드오브네이처 박재홍 대표를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지방자치의 진화를 생각하다 : 광역시·도 맞춤형 이민정책과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6월호는 '울산광역시'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지방외교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지방자치분권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지역균형발전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